

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2021. 11. 30 (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노조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자유기업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 한국대학생포럼

CONTENTS

발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07
<hr/>	
토론	①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②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35
	③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9
	④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61



실사구시 경제운명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발 제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실사구시 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방안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I. 서언

II. 예측가능한 미래 (Predictable Future) 를 위한 정책과제

1.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대응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재정 건전성 제고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적정화

III. 전국민 생활보장 (Guaranteed National Minimum Life) 을 위한 정책과제

1.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
2. 노인빈곤을 대폭적인 축소
3. 안심할 수 있는 자녀 양육 및 보육 지원
4. 재해와 실직으로부터 안전 보장
5. 국민생활보장제도의 관리와 재정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서언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4.2%로 후퇴한 가운데 글로벌 교역량도 감소하였고,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로 글로벌 질서가 요동치고 있음
 - 코로나 백신의 개발 및 접종 등으로 코로나로 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K자형의 양극화된 회복이 조심스럽게 제기됨
-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음
 - 첫째, 2020년의 합계출산율이 0.84로 하락하여, 출생아수가 27.2만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내국인 기준으로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져 총인구는 5,178만명이 됨
 - 둘째,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아, 2020년에는 -1.0%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1년 역시 당초의 기대와 달리 경제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음
 - 셋째, 취업자수가 2020년 12월말 265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만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
 - 넷째, 2020년의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가두당 월 평균소득은 1.8% 증가하였고 가치분소득도 2.3%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0.5%, -5.1% 감소하고, 이전소득이 25.1% 증가하였음. 계층간 소득분배 동향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2019년의 4.64배에서 2020년에는 4.72배로 높아졌음.
 - 다섯째,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지향으로 세출은 급속히 늘어난 반면, 세입은 크게 부진하고, 코로나로 인한 추경의 편성으로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71.2조원으로 국가부채가 846.9조원(GDP대비 44.0%)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이어져, 2021년의 국가부채 규모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여섯째,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2020년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10.3% 상승하였고, 주가지수는 27.7% 상승하여, 가계 자산은 증가되었으나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1726.1조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

- 실사구시 경제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미래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우리 국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는 첫째, 기후변화 등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둘째, 북한 핵문제 포함 안보 위기, 셋째, 미·중간 대립구도 등에 의하여 촉발되는 경제위기, 넷째,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위기, 다섯째,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과 재정위기,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 위기 등이 있으나, 보건복지 부문의 대응과제는 주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위기가 될 것임
- 복지정책 강화의 기본방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예측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빈곤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지켜 줄 수 있는 안전망인 '전국민 생활보장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임
 - 예측가능한 미래 (Predictable Future) : 합리적 가정과 전제에 기초하여 미래를 전망하여 볼 때, 사실상 지속가능 불가능(unsustainable)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속가능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 전국민 생활보장 (Guaranteed National Minimum Life) : 헌법 34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의 실행 전략을 수립함
- 예측가능한 미래 (Predictable Future)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 사회 대응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적정화
- 전국민 생활보장 (Guaranteed National Minimum Life)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
 - 노인빈곤율 대폭적인 축소
 -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지원
 - 실업 및 재해로부터 전국민 안전 보장
 - 전국민 생활보장 제도 관리와 재정



II.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1.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1)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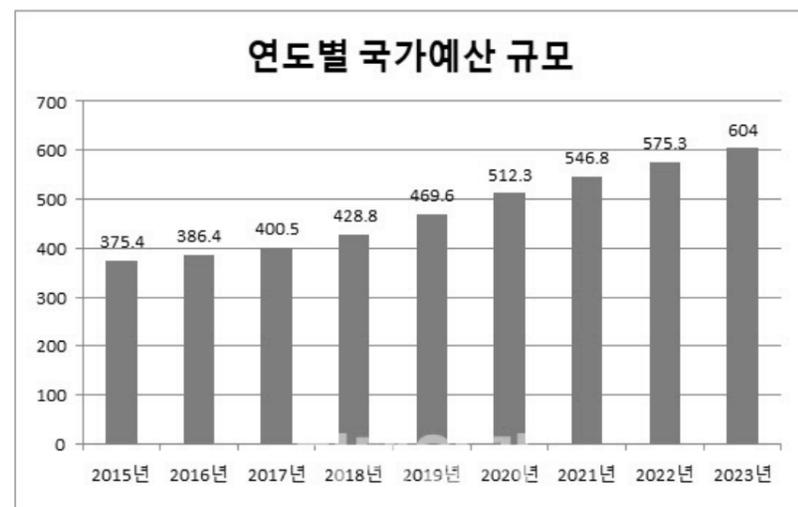
○ 2020년의 한국의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하락

- 1990년대 전반 1.7명을 상회하던 출산율이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에는 1.48명, 2005년에는 1.09명으로 하락. 이후 2012년에는 1.30명까지 회복되었다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750년에 한국의 인구는 완전히 소멸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 중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2020년 5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05곳)

○ 문재인 정부는 인구 증가 시대의 정책을 유지

- 공무원수 증원 : 2016년 110.8만명에서 2019년 119.5만명으로 3년간 8.7만명을 증원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연 3만명씩 증원 계획을 추진. 공공기관도 지속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음.
- 국가예산의 증액 : 2017년 국가예산은 400.5조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555.8조원으로 증액되어, 연평균 8.5%씩 증액. 이는 동기간 경상경 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규모.



2) 대책

○ 초 저출산 문제는 절대적 인구감소 자체보다는 인구감소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과 상충

-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독 낮은 여성고용률, 50대 중고령층의 불안전 고용 상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국가라 아니라 일자리 부족국가임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저출산은 2030년대 중반경까지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적정인구의 개념으로 볼 때, 총인구를 4000만~4500만으로 유지하는 국가 인구전략의 수립이 필요

- 출생아수를 2020년 27만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을 1.2명 수준으로 높여야 함

- 2006년 이전에는 국내총생산의 0.5%도 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최근 1.38%까지 높여 왔지만,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국가예산 증액이 아닌 저출산의 근본 원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한시바삐 재편하여 예측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주어야 함

-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승효과로 현재의 추세로는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필두로 개인·가계·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시키는 규제혁파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로 체질혁신이 필요

- 출생아수 40만명 수준에 적합하도록 사회 경제 전반의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정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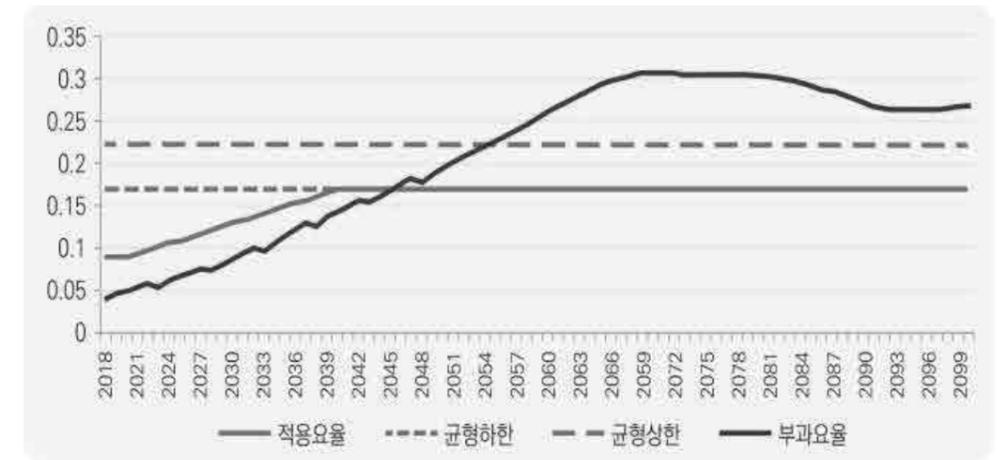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1)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 (문제점)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9년 특별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에 필요한 2060년경의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33.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이는 현재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 9%의 3배 수준을 넘는 것임.
 -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연금급여율에 상응한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은 17.1~22.2%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보험료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그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익비가 1.0 이하로 하락하여 민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불리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제도 가입 유인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 큰 차원의 구조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수급부담구조를 균형화시키는 조치가 시급함.
- (대책)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더 이상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연금보험료율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2018년말 제출된 정부의 개편방안(제2안) 연금급여수준을 45~50%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보험료율은 12~13% 수준으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개선은 적립기금은 2063년경에 소진되고, 2065년에는 보험료율을 35.6%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미래세대부담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문제를 더욱 심화
 - 가능한 적립기금의 소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금수급부담구조를 가능한 조속하게 균형화시키는 것이 필요
 -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수리적균형보험료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적립기금이 2100년까지는 유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됨

〈 적립방식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율 인상방안 (2018~2099년) 〉

(단위: 비율)



2)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 (문제점)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은 재정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1995년 이후 4차례의 큰 법령의 개편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바뀌어 왔음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국고보조가 4차례의 개혁으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대부분이 과거 저부담·고급여 구조 하에서의 장기적 제도운영으로 누적된 연금충당부채가 2020년 말 기준으로 각각 829,8조원과 214,4조원이 쌓인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금 당장 수급부담구조를 균형화하더라도 국고보전 자체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등 재정수지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상황에서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선제적인 공적연금 제도 개혁이 형평성 측면에서 강력하게 요구됨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전망 〉

(단위 : 조원)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공무원연금	-2.1	-6.8	-12.2	-17.2	-21.4	-25	-27.8
군인연금	-1.7	-2.5	-3.4	-4.2	-5	-5.8	-6.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2020. 7

- (대책)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시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과 같이,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완전히 동일하게 재편하되, 기존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현행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는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운영과 재정은 국민연금 제도와 독립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와의 일원화는 신규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분립적 운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유사하게 되는 2050년대에는 완전한 제도 통합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임.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불안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금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연금동결 연장)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이 추진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2024년에는 적립금 소진이 예상됨.
 - 험료율을 매년 3.2%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법정상한선인 8.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본 전망은 2021년에는 3.49% 인상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고갈연도는 앞당겨질 가능성

〈 건강보험 재정 전망 〉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수입	67.8	74.3	81.3	87.7	94.1	102.4	111.1	119.0	124.9	131.0	7.6
지출	71.9	78.1	84.6	91.8	98.7	106.1	114.1	122.6	131.8	141.7	7.8
재정수지	△4.1	△3.7	△3.3	△4.2	△4.6	△3.8	△3.0	△3.7	△6.9	△10.7	
적립금	16.5	12.8	9.5	5.3	0.7	△3.1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료 전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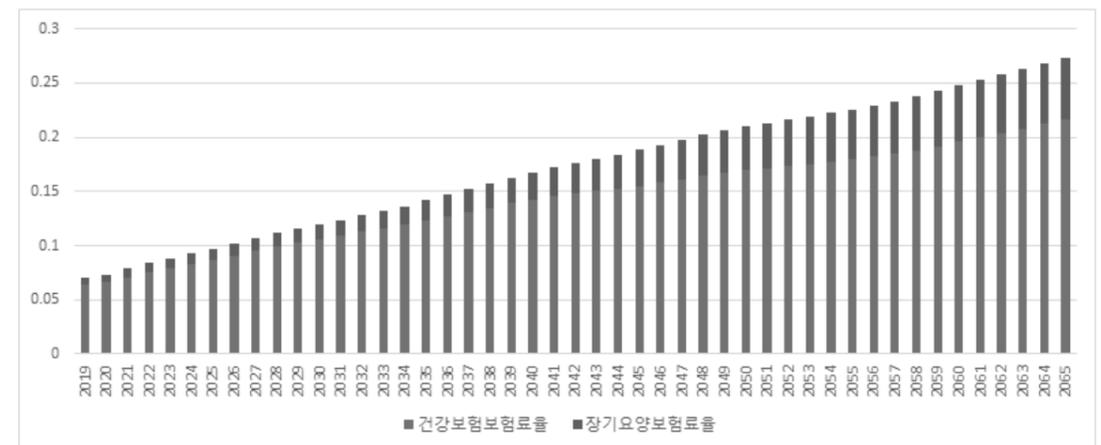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건강보험료율	6.46	6.67	6.90	7.14	7.37	7.61	7.85	8.10	8.36	8.63
보험료율 인상률	3.49	3.20	3.49	3.49	3.20	3.20	3.20	3.20	3.20	3.20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0년은 기 결정된 보험료율, 2021~2022년은 매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0%씩 인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보다 재정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할 수 있음.
 - 2009 ~2019년 기간 중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0.1%로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급속히 증가될 전망이다. 2065년경이 되면 건강보험은 24% 내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담만 소득대비 30% 수준이 되면, 국민연금 30%수준과 합하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고령화에 따른 급여자출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망됨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전망 〉





2)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관련 규정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은 각년도 급여지출의 50%가 될 때까지는 잉여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적립금을 헐어서 사용하고 있음 (법 제38조 1항)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

- 8대 사회보험제도 중 2개의 제도만 공공기금화 되지 않고 있음.

-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변경 포함) 및 결산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돼 있으나, 재정전반에 대한 심의없이 그 일부인 국고지원 예산만을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제한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통합재정의 확립이 저해되고, 우리나라의 총 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 추계되는 등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음.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통합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전무
-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괄 관리
- 보험료 납입 여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이행으로 자동 해결
-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통합된 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미 통합 관리

○ 건강보험 급여와 부담의 합리적 결정 시스템 강화

- 현재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나름대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는 있으나, 최근 가입자 단체가 연합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부담 강화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결정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준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는 개인별 각종 질환의 발생 유형에 따라 다른 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특성에 따른 장래 질병 가능성의 예측과 사전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 개발을 통하여 질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활성화 지원
- 건강보험 수가에서 배제되어 있는 각종의 비의료 건강관리 행위 중 효과성이 높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예방기능을 강화

Ⅲ. 전국민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사회보장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1) 기본소득 도입 주장

○ 최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함.

- 기본소득 주장자들은 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주민등록기준 2020년말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명이다.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면 매년 186조 5,88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추정 2020년의 우리나라의 경상GDP는 1,924조 4,529억원이므로, GDP 대비 9.7%에 해당하는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해야 함.

○ 2020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2%,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율은 27.2% 수준임. 사회보장위원회의 2018년 제3차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고정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은 2020년의 11.7%에서 2060년에는 28.2%로 높아질 전망이다

- 2060년 GDP 대비 16.5%포인트가 높아지면, 국민부담률은 43.7%로 치솟게 됨. 여기에 기본소득 9.7%를 합하면, GDP 대비 53.4%를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함.

- 2018년의 OECD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이 34.0%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19.6%포인트 높은 국민부담률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기존의 복지제도 일부를 상쇄가능하다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사



회복지수준이 OECD국가 평균인 GDP 대비 20%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총액적으로로는 상쇄할 것이 거의 없음

2)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

-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정부법안이 국회 제출
 -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와 자영자에게도 연차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여 현재 1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에는 1700만명으로,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완성시킬 계획
 -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은 현재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정부의 1차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확대 대상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일자리 불안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검토한 과제
 -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앞으로 9개월간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대책은 시행시기가 잘못된 것임
 -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도 문제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쿠키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종사자 중에서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였음
 - 특고 종사자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상자에게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내라고 함. 따라서 특고 종사자를 정부가 두 번째로 타기팅하는 것 역시 전시 행정에 가까움.

3) 전국민 생활보장 제도 구상

-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제도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제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기존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틀'이 필요
 - 최근 사회보장제도를 개편과 관련 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

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 개편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

- K자 형 코로나19 회복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
 -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 추구하는 정의는 극단적인 결과의 평등이나 소극적인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 (Equality of Condition)을 추구
 - 공정철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마이클 샌더스 교수는 최근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조건의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보험의 개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콩도르세도 조건의 평등을 처음으로 제시
- 국민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국민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각 제도는 국민생활보장제도하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함
 - 보장된 사회보험제도로 최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국민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적정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설정된 국민생활보장(National Life Security)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급여 제공
 - 국민생활보장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원체계를 사회보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임
 -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기준도 문제이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지급이 개시되하므로, 빈곤으로 전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음. 이에 비해서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시 바로 지급이 개시되므로 위험 발생 당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maintenance)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2. 노인빈곤율의 대폭적 축소

1) 문제점

- 기초연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5%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전체 노인 70%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음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노인빈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의 악화를 통제하기 어렵게 됨

2) 대책

-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체계' 로 전환
 - 국민연금은 1소득자 1인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가능한 반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자 1인만 연금을 수급하므로써, 세대간 이전 상의 불공평성과 함께,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음.
 - 연금 수급에 필요한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인 만큼, 크레딧 제도 등의 활용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홑벌이 가구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 기초연금 지급 산식과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축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노인의 70%에게 월 3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에게는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기초 연금이 빈곤율을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수준 만큼 모든 국민의 일정소득 기준액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정 검토
-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사각지대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빠르게 증가될 전망이다 만큼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필요

3.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지원

1) 문제점

-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책임보육제도를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각종의 규제로 인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워킹맘의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일-가정양립제도가 시행된 지 18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무엇보다 제도 실행에 적극적인 동참자로서의 기업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한데,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여전히 저조. 또한 고용보험에 기반하고 있는 현 제도상 접근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의 종사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2) 대책

-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검토
 - 제6의 사회보험을 신설하여 고용주, 근로자, 국가에게 부모보험료를 징수하는 별도의 보험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출산 가정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휴가·휴직제도를 재정비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
 - 모성보호 제도는 고용보험 제도하에 있으나 부모보험 도입시 별도의 조직의 신설없이 전 국민을 지원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에 관련 부서를 만들어 운용 가능
 - 부모보험에 필요한 재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부모보험기금'을 신설하되, 기존의 각종 저출산 관련 급 여를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 **현행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고용율 및 출산율 제고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 혁파와 지원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통하여 보육 및 육아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편 필요
 - 보육료 규제 단계적 완화 : 보육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육료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워킹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
 - 아 아동수당 확대 : 만 6세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만 11세 아동까지 지급함
 -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예산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인력 수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양육수당 현실화 : 양육수당의 현실화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책임성 동시 강화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함

4. 재해 및 실직으로부터 전국민 보장

1) 문제점

-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보험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는 별개로 운영되어 있음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전국민의 재해위험에 대한 관리와 근로가능 기간 동안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
 - 근로자 중심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대상자의 89.2%가 가입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46.1%만 가입하고 있음 (2020년 8월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 적용관리로 가입률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고용보험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됨
-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관계를 정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존재하고,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관련하여 플랫폼 경제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영세 자영업자 역시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으나 현재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틀로는 적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제도로 적용받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에 제외되어 있으며, 선원은 선원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농어민은 민영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2) 대책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틀은 유지한 상황에서, 전국민 재해보장과 전국민 취업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함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함
 - 선원 재해보험도 산재보험과 통합하고, 농어민 재해보험도 산재보험과 통합



-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 징수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함께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함
 - 위험 발생 이전의 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을 축소하도록 유도

5. 국민생활보장제도의 관리와 재정

1) 국민생활보장제도의 관리 운영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령 내 국민생활보장 제도에 필요한 법규를 신설**
 - 급여의 지급 등은 기존의 각 제도별 급여의 관리 주체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국민생활보장제도 운영조직과 국민생활보장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되, 기존의 공단 중 하나의 조직에 부설함. 사회보장정보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과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함
 - 국세청에서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각 공단의 계정으로 이전되고, 소득이 zero인 가입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국고에서 총괄하여 국민생활보장기금에 이전
- **현행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생활보장 급여에 필요한 추가 자원 소요**
 - 제도 초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민생활보장제도의 재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양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 필요
 - 2021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산은 각각 4조 6113억원, 5,791억원 임

2) 사회보험료 징수, 국세청으로 통합

- **현재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부과 기준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소득세 부과시 사회보험료도 함께 부과하도록 개편**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되 (현행 사회보험 제도별 부과기준 (상하한선 유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zero인 가입자로 각 사회보험에 적용
- 적용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제도별로 일소함
-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액이 너무 과소하여 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 건강보험 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

-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2022년 이후 2단계 이행 이후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은퇴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더 커지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예상
-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제2단계 건강보험료 조정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가능한 조기에 자동차 및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확립
-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의 격차 시정 : 하한 보수월액 (279,300원; 보험료; 19,140 - 전년전년도 직장평균보수월액의 8% 수준), 상한 보수월액 (보수월액; 102,739,068원, 보험료; 7,047,900 - 전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의 30배),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367.8배로 한국과 같이 상한 하한의 격차가 높은 국가는 전무하며, 사실상 건강보장세 개념임



IV.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급격히 발전하여 왔으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 사회보장위원회가 산정한 2020년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의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의 비율은 12.5%이나 2040년에는 20.1%, 2060년에는 27.6%로 증가할 전망이다 (3차 추계 대비 과소 추계 가능성)

〈 사회보장위원회 4차 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

(GDP 대비 %)	제3차(2018)			제4차(2020)		
	사회재정	일반재정	사회보험	사회재정	일반재정	사회보험
'20년	12.1	4.4	7.7	12.5	4.5	8.0
'30년	16.3	4.9	11.4	15.8	4.8	11.0
'40년	20.8	5.1	15.8	20.1	5.1	15.0
'50년	25.3	5.0	20.3	24.5	5.1	19.4
'60년	28.6	4.8	23.8	27.6	4.8	22.8

- 사회보장 지출은 현재의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접근하지만, 2060년의 노인인구비율은 43.9% 수준으로, 노령인구 대비 중복지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음. (선진 각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30% 수준에서 수렴)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비정형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기존의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제도만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직면
-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혁과 함께, 전국민이 안심하고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는 새 보장체계인 국민생활보장제의 도입이 필요
 - 진보측이 주장하는 '절대적 평등'과 보수측이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뛰어넘은 '조건의 평등' 개념에 기초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토론 1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동 욱



실사구시 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방안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수리적균형보험료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적립기금이 2100년까지는 유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됨”(p.9)
- =>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약 44%)와 비슷한 수준인지 궁금함. 나아가 이 방안이 노후 3층 연금체계(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강화와 함께 가는 것인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 => 모범적인 해외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통합 시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도 신설되는지 ?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 => 혹시 고용보험 적자 문제(22년 고용보험기금 적자규모 5조 5,000억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궁금

○ “건강보험보다 재정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할 수 있음. 2009 ~2019년 기간 중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0.1%로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p.12)

- => 일본처럼 시설요양보다 재가요양을 대폭 확대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

=> 전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

○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

=> WHO도 예방의학이 주축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예방 프로그램(예: 정기 건강검진 등)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p.16)이 현재 여당 대선후보 공약인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

○ 국민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기준도 문제이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지급이 개시되므로, 빈곤으로 전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음.”

=> 기존의 탈수급 방안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제도의 원래 목적인 ‘자립기반 강화’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에 비해서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시 바로 지급이 개시되므로 ‘위험 발생 당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maintenance)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 소득대체율이 100%라는 의미인지?

- “국민생활보장제도 도입 목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더 강화하면 안 되는지?

=> “소득 zero 대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급여산정”이 현행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폐지를 의미하는지?

○ “기초연금 지급 산식과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함”

=> 시급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

○ “‘부모보험기금’을 신설하되, 기존의 각종 저출산 관련 급여를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 매우 필요함. 한때의 초 저출산율을 극복한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는 인식이 강함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함”(p.22)

=> 산재보험 가입은 필요하나 ‘안정적 직장(이직률 매우 낮음)’ 성격이 강한 이들 직역에 실업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있는지?

○ 사회보험료 징수, 국세청으로 통합

=>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보험은 ‘급부(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부(보험급여)’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한 반면 일반조세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함

○ “건강보험 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조속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정부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사구시 경제운명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토론 2

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환

실사구시 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 방안 - 토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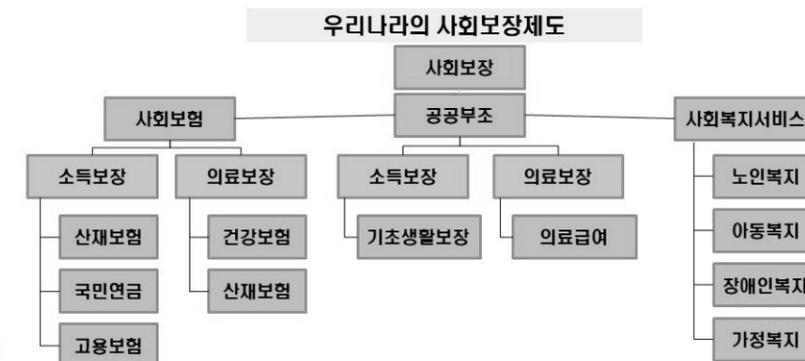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1

1. 사회보장제도

◆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 소득과 건강 + 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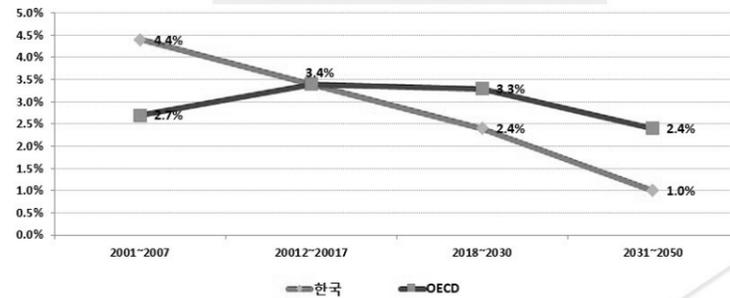


2.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

◆ 암울한 경제예측

- 2030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 원인은 인구고령화

잠재성장률 추정 : OECD vs.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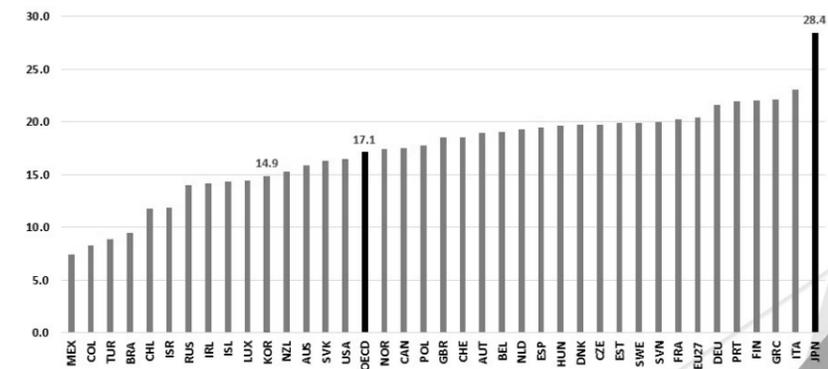


3

3. 인구고령화와 복지

◆ 아직은 젊은 나라, 기회는 있어

2019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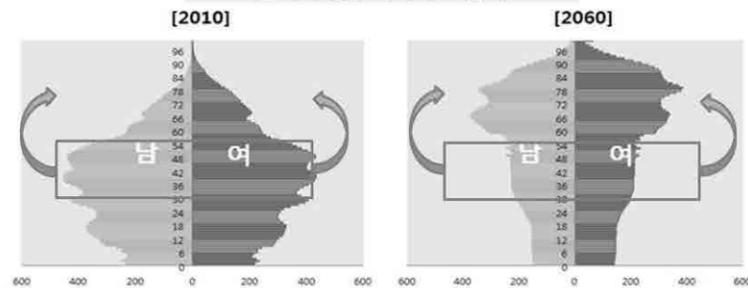
5

3. 인구고령화와 복지

◆ 한국 경제 vs. 한국 고령화

- 후발주자 vs. 선두주자
- 복지제도는 정부+시장 → 자원(부과방식) 필요 → 인구고령화 고려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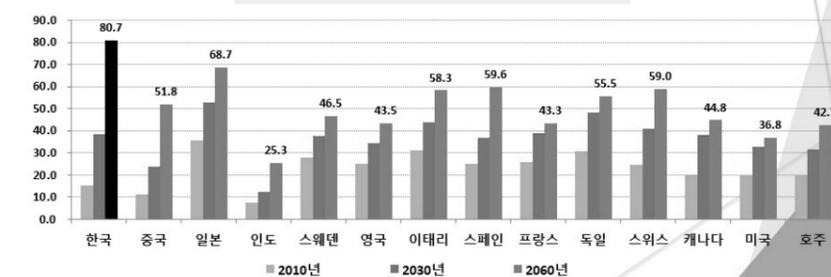
4

3. 인구고령화와 복지

◆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될 것

- 미래(세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필요 → 차기 정부의 과제
- 가장 위험한 발상 : 현재만 고려해 지출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
-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필요(지속가능성 → 효율성 → 똑똑한 정부 필요)

노년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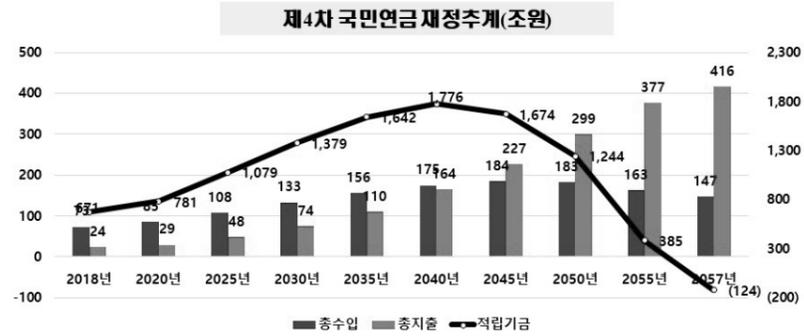
6



4. 소득

◆ 국민연금기금 2057년(?) 고갈 → 보험료 35% 정도

- 국민연금 5년마다 재정추계
- 2018년 심각한 문제 인지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부는 직무유기



7

4. 소득 : 개혁

◆ 개혁의 방향성

- 특수직역연금 vs. 국민연금
 - ▶ 동일하게 통합(일본)

특수직역연금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구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공무원연금(조원)	-2.1	-6.8	-12.2	-17.2	-21.4	-25	-27.8
군인연금(조원)	-1.7	-2.5	-3.4	-4.2	-5	-5.8	-6.2
매일 국민 부담(억원)	-104.1	-254.8	-427.4	-586.3	-723.3	-843.8	-931.5

▶ 공무원 증원

- ✓ 있는 공무원의 재배치 & 효율성 극대화 우선 고려
- ✓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정책 → 희망없는 나라 만드는 정책

9

4. 소득 : 개혁

◆ 개혁의 방향성

- 인구고령화 하에서도 지속가능한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
 - ▶ 예1,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스웨덴)
 - ▶ 예2,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중심(호주 등 주요국)
- 가구주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개인별 노후준비(공사연금)
- 기초연금은 대상 축소 & 더 두텁게
 - ▶ 가능한 공사연금을 활용하도록
 - ▶ 스스로 준비하도록 재정지원(공사연금) > 세금으로 사후적 지원(기초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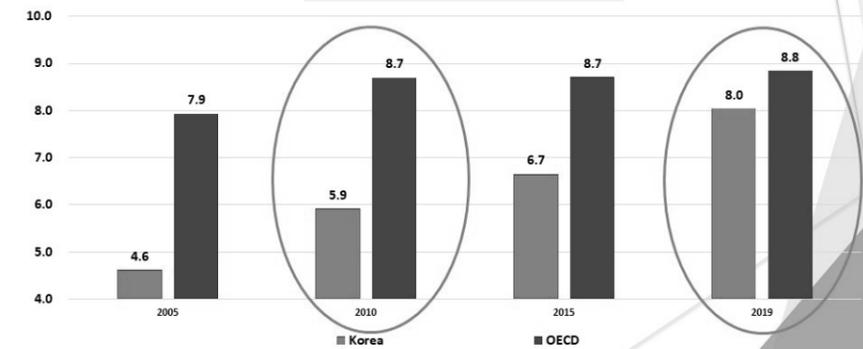
8

5. 건강

◆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미래의 전체 복지체계 예측 가능

- 지금 상태 유지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워

GDP 대비 의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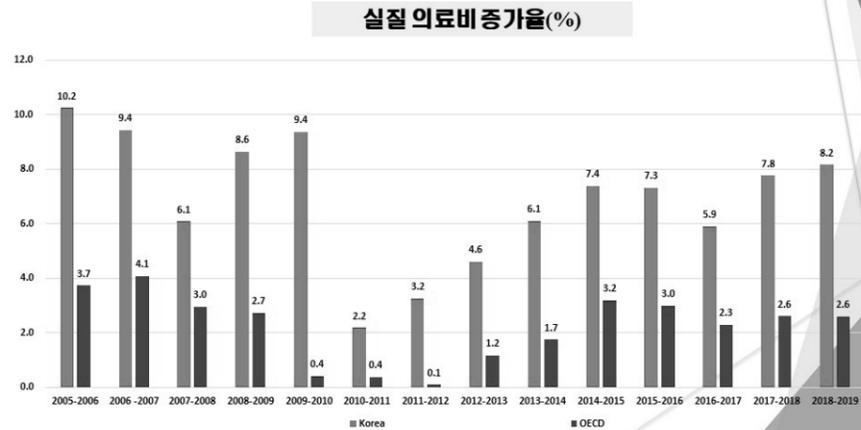


10



5. 건강

◆ OECD 국가 중 실질 의료비 증가율 가장 높아



11

5. 건강

◆ 국민연금

- 2057년 고갈 → 보험료 35% 정도
- 그나마 국민연금은 세계 3개 규모

◆ 국민건강보험

- 현 15% 정도의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45% 정도 지출
-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완벽한 부과방식

◆ 미래세대 부담 :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는가?

- 국민연금 35% + 국민건강보험 ??% + 기타 보험료 + 소득세

13

5. 건강

◆ 실제 국민의 부담 : 매년 평균 9.1% 증가 & 보장률은 그대로

국민의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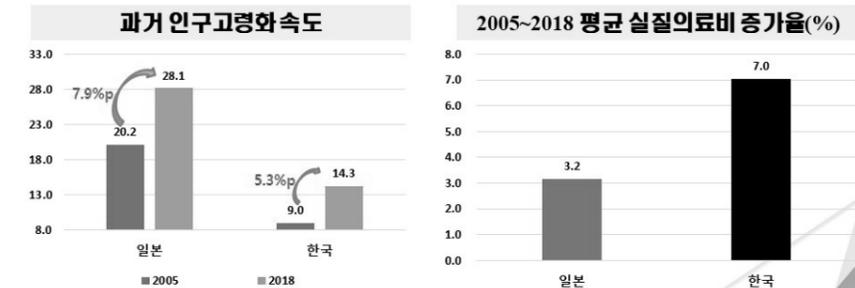
구분	액(억원)			증가율(%)		
	보험료	급여비	진료비	보험료	급여비	진료비
2008년	249,730	266,543	348,690			
2009년	261,661	300,409	393,390	4.8	12.7	12.8
2010년	284,577	337,493	436,283	8.8	12.3	10.9
2011년	329,221	358,302	462,379	15.7	6.2	6.0
2012년	363,900	375,813	478,392	10.5	4.9	3.5
2013년	390,319	396,743	509,552	7.3	5.6	6.5
2014년	415,938	428,275	544,272	6.6	7.9	6.8
2015년	443,298	457,602	587,869	6.6	6.8	8.0
2016년	475,931	510,149	651,844	7.4	11.5	10.9
2017년	504,168	548,917	707,525	5.9	7.6	8.5
2018년	538,965	631,683	779,104	6.9	15.1	10.1
2019년	591,328	689,966	861,110	9.7	9.2	10.5
평균				8.2	9.1	8.6

12

5. 건강 : 개혁

◆ 인구고령화 vs. 의료비 증가율

- 과거 일본의 인구고령화 속도 더 빨라
- 동기간 의료비 증가율 훨씬 낮아(실질 의료비 증가율)



14

5. 건강 : 개혁

◆ 현재의 접근

$$\text{보장률}\uparrow = \frac{\text{급여비(국민 부담)}\uparrow}{\text{급여진료비} + \text{비급여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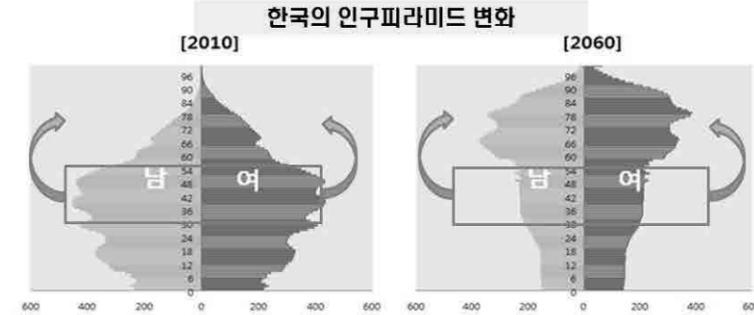
◆ 앞으로의 접근

$$\text{보장률}\uparrow = \frac{\text{급여비(국민 부담)}}{\text{급여진료비} + \text{비급여진료비}\downarrow}$$

6. 복지, 재정, 그리고 미래

◆ 재정 : 보험료 + 세금 → 인구고령화 하에서 막대한 재정 필요

- 근로자수 X 소득(임금) X 보험(세금)료율 : 최고의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 출산율 확대는 이미 늦었을 수도?



5. 건강 : 개혁

◆ 숲 → 나무

- 공적연금으로부터의 교훈
- 막대한 공적 기금도 한계로 인해 '정부+시장'의 다층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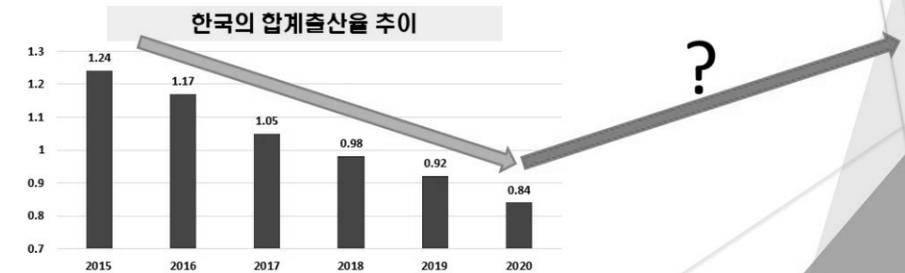
◆ 기타 : 의료수가 + 예방중심(4차산업혁명의 주요 시장)



6. 복지, 재정, 그리고 미래

◆ 재정 : 보험료 + 세금

- 근로자수 X 소득 X 보험료율
- 근로자 수 확보 위해 출산율 확대? 출장장려금 확대하면 회복?
 - ▶ 당연히 사회가 노력해야지만, 구조적 변화는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6. 복지, 재정, 그리고 미래

◆ 재정 : 보험료 + 세금 → 근로자수 X 소득 X 보험료율

● 근로자수

➢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

- ✓ 남성 중심의 육체 노동 요구되는 세상 아냐!
- ✓ 여성근로자 노동시장 참여
- ✓ 일&육아(모성보호제도)의 완벽한 병행을 위해 아낌없는 재정투입
- ✓ 출산율 높이지면 감사할 일

19

7. 결론

◆ 복지 vs. 성장

- 정치적 & 미래 고려하지 않는 재정책대만 주장하는 복지정책은 성장 저해
- 성장을 위한 복지 필요 : 결과의 복지 → 기회의 복지

◆ 주거 복지? 다른 복지들?

- 국민이 행복한 정부란?
 - 작지만 똑똑한 정부
- 최악의 정부
 - 크지만 똑똑하지 않은 정부
- 더 최악의 정부
 - 크지만 똑똑하지 않은데 본인이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정부

21

6. 복지, 재정, 그리고 미래

◆ 재정 : 보험료 + 세금 → 근로자수 X 소득 X 보험료율

● 소득

➢ 생산성 높여야! → 교육 개혁 → 출산율 인정하고 소수정예부대 → 삼성&애플&아마존 등 10개만 있다면?

- ✓ 여전히 암기 중심 교육, 문법 중심 어학 교육, 원리가 아닌 답을 빨리 찾는 수학 교육, 대학은 비용 최소화(예, 반값등록금)의 고인물, 모두가 공무원&공기업 준비, 사교육을 통한 부의 되물림..... → 생산성 증대?

➢ 미래를 위한 교육이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

➢ 아낌없는 재정 투입을 통해 교육 개혁(공교육=결과가 아닌 기회의 균등)

2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



실사구시 경제운명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토론 3

서울시복지재단,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철



- 2000년에 생산연령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노년인구 부양부담의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 KDI는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3%에서 2050년에는 0.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여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요망

- 저출산 대책은 우선 지난 15년간의 예산과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부서별로 파편화된 정책을 정리하고, 주택 지원, 양육 및 돌봄지원, 현행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하는 출산크레딧의 확대 등 결혼 및 출산을 걱정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식의 정착 및 제도화가 중요하다.
- 이민정책의 적극적 고려 필요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 기구의 설치

○ 독일의 사례에서 출산율 회복은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 최근 출산율이 오름세인 독일의 예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독일의 출산율은 1990년대 1.3까지 떨어졌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57까지 회복
- 독일의 출산율 증가의 원인은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및 최장 14개월까지 수급 가능한 급여 67% 수준의 부모수당(Eltersgeld)의 도입 등에 따름
- 우리나라도 부모수당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함.

2. 우리 나라는 재정이 건전한가? 재정건전성은 중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 공수 교대 후 뒤바뀐 재정건전성의 입장

- 문재인정부는 야당시절 국가채무 40%선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강조
-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은 사라진 단어
- 내로남불의 전형
-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는 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쓴 개념,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당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
-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로 집계.
- 2019년 5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비판.

○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17년 130조에서 2022년에는 217조로 문재인 정부 5년만에 67% 증가, 2050년 고령자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며, 향후 사회보장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

-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20년)에 따르면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40년 20.1%에 이르고, 2060년 27.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18년도의 제3차 추계에서는 2060년 예상치가 28.6%였다. 현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2060년에는 스칸



디나비아국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으로는 재원조달의 한계가 명백하므로,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구조 개편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 확대재정 주장**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함께 정파적 이익도 고려된 상황

○ **재정은 국가안보와 같다**

-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과 정치가 들이 국가의 살림을 좀먹지 못하도록 정파를 초월한 중립적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등과 같은 재정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

3.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

○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식어버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양 이 급선무,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 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함.**

- 사회복지 지출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함.
- 이것이 공적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이 풍요해지는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임.

○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 경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 스웨덴은 1990년대 높은 재산세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경제의 정체가 심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4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2007년 부유세를 폐지, 2008년에는 주택 분 재산세를 폐지하였고,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
-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준칙, 연금개혁 및 기업친화적 감세정책으로 자본 유입이 증가하였고 경제성장이 촉진
-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GDP대비 25% 순 부채국에서 2007년 GDP대비 20% 순 자산국으로 전환,
- 스웨덴은 미국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하지만,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주도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에서 모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독일에서 경제의 성장 없는 복지국가의 지탱이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공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져야 함.**

- 사회양극화도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근본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임.



4. 진화론적 복지확대와 안심소득제

○ 우리나라는 꾸준히 제도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기초보장을 확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후, 수급자는 2001년 142만명(수급율 3.2%)에서 2014년 132.9만명(수급율 2.6%)까지 하락하였으나, 부양자의무 기준완화로 수급자는 2018년 177.4만명(수급율 3.4%), 2019년에는 188.1만명(수급율 3.6%)으로 증가.
-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형 EITC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CTC)이 도입
-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2009년 59만가구에서 2019년 506만가구로 8.6배 증가하였고, 지원액은 2009년 4,500억원에서 2019년 5조1,100억원으로 11.4배 증가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도입 20년만에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

○ 여전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2019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 2018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 가까이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이 704만여명으로 추산.

○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주장자마다 입장이 상이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중위투표 전략에 불과
-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가난한 이에게는 너무 적음.

-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 역진적이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도 없음.

- 기본소득은 저소득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뺏아서 중산층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로써 정의와 배치되며, 사회적 배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구성원리에도 충돌

-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국의 위치는 남유럽과 유사한 복지체계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안심소득제가 등장

- 안심소득제는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유인 저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6년 박기성 교수가 제안

- 안심소득제는 가구의 소득과 기준소득과의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존재

- 프리드먼은 부의 소득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

- 그런데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6.9%의 주민이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기존의 각종 복지제도를 철폐하고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 복지수혜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

-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 복지제도(Pan-welfare System)"라는 것으로,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해체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 복지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시작

-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 비교 집단을 선정해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계획



- 안심소득제는 현행의 공제·감면·면세 등 소득세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과 서울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않도록 설계

5.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전략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예산 조정 혹은 조세감면 등을 통한 자원 조달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움.
 - 재정지출구조 개혁이나 소득세제 공제항목 정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규모도 얼마 되지 않고, 중소기업 R&D를 위한 조세감면과 기부금 공제 등도 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해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
 - 기재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배터리 투자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1조5천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함.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4%로 OECD 평균인 33.8%에는 6%정도 차이**
 - 하지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하여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
 -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4년 17.1%에서 5년 새 3%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9%(2018년 기준)와 약 5%의 격차.
-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퍼주기에만 몰두했고 자원 조달 방안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증세는 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핀셋증세'와 징벌적 재산세를 통해 2018~2022년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16조원의 세금을 징수

-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9년 705만명으로 면세비율은 36.8%,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조세의 공정성을 악화

○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 지금부터 증세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조세부담율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20%수준에서 OECD 평균인 25%까지 올릴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OECD국가와 비교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의 비중을 높이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OECD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함.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함.
-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 가운데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및 이를 위한 증세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자신들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양재진·윤성원·장우윤, 2021).**
 - 보편적 증세에 관한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따라서 증세 문제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실사구시 경제운명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토론 4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 기 효

실사구시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방안 세미나 2021.11.30
토론

국가보건시스템 혁신



이기효
보건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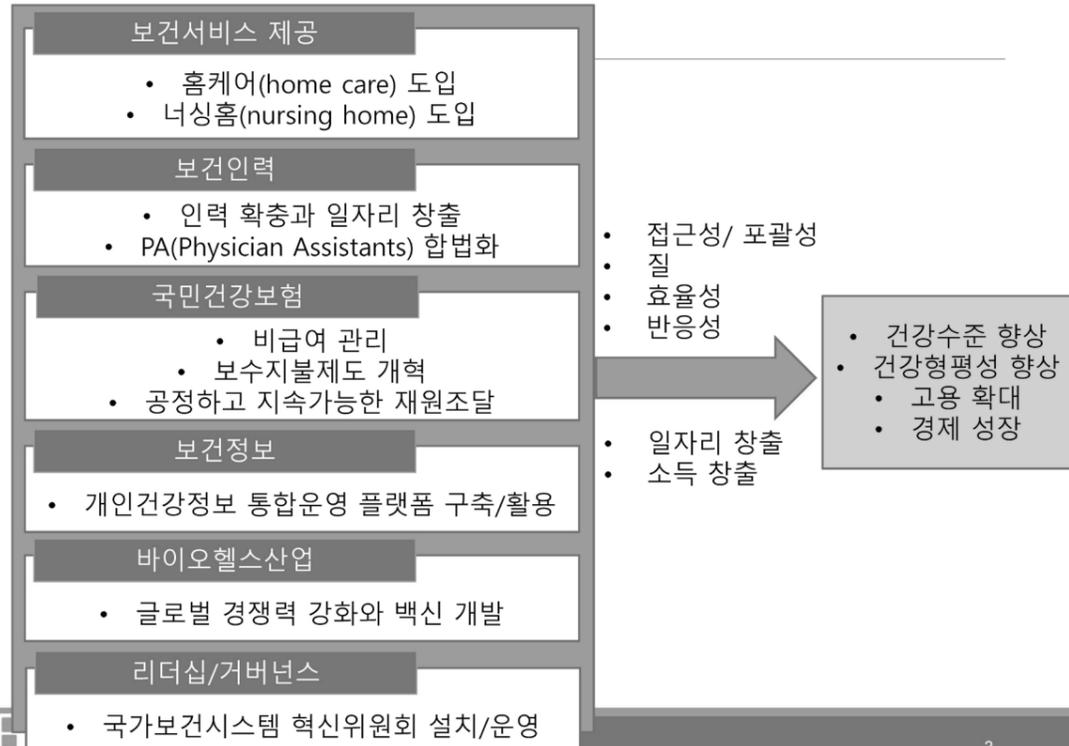
국가보건시스템의 중요성



2/27/2002



국가보건시스템 10대 혁신 과제와 목표



과제2. 너싱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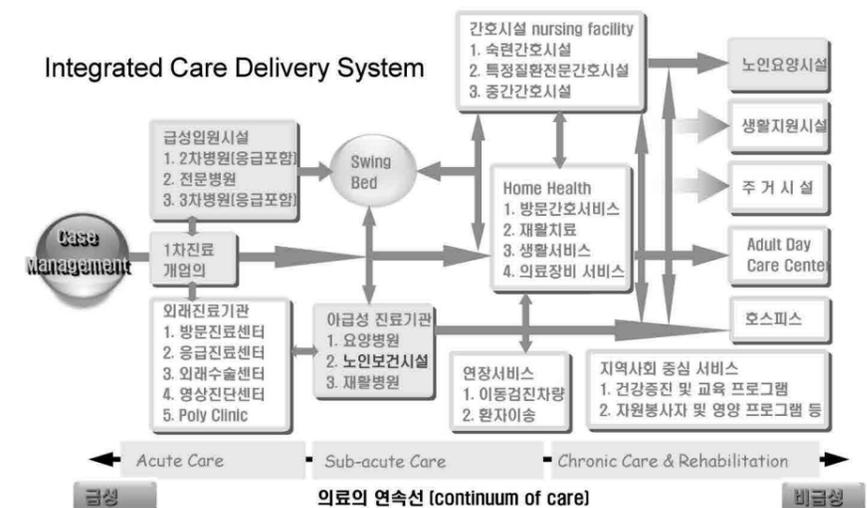


과제 1. 홈케어 도입

- 가정에서의 보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노인의 시설입소(병원입원)를 최소화하고, 가정에서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음
- 노인 보건 이외에 영유아 진료, 장애우 재활, 산후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되어야 함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보건서비스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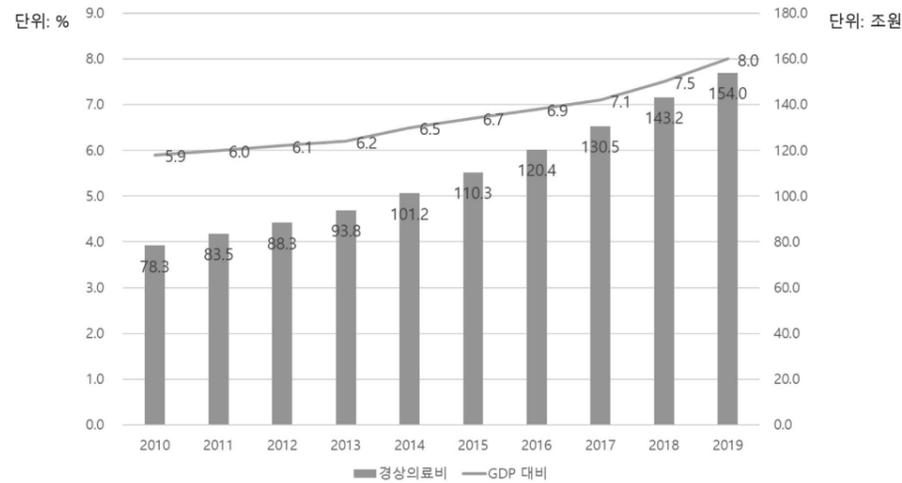
참고: 통합적 보건시스템 구축





과제3. 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추세의 지속은 불가피한 현상임
- 급속한 의료비 증가에 비례하여 보건부문 고용이 증가해야, 의료비 증가가 경제 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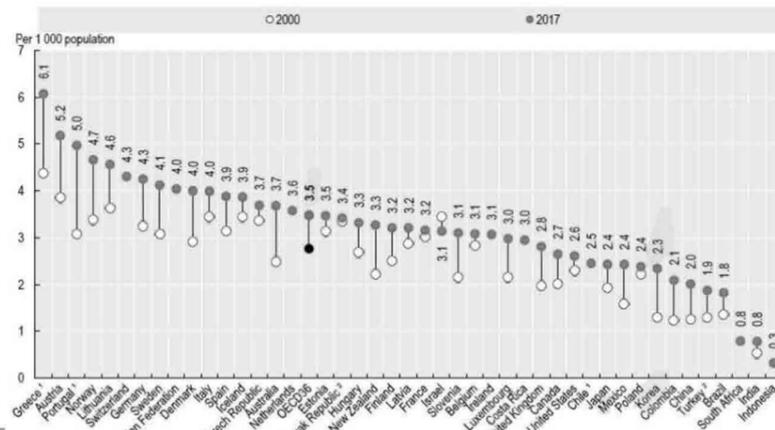


과제4. PA 합법화

- 의사 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불법 PA(Physician Assitant) 운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불법 PA 문제는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치부이자 후진적 관행이므로 즉각 개선이 요구됨
 - 대안1 : 의사 수를 대폭 증가시켜 PA 운용 필요성 없애고 PA 운용관행 불식
 - 대안2 : PA 직종을 정식 보건인력으로 합법화하고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수립
- PA 합법화가 합리적 대안
 - PA 양성/운용으로 의사 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
 - 정형화된 단순 반복적 의료행위를 PA가 처리하게 되면 의사는 더욱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
-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직능을 부여하고, 진료협력사 정원에 연동하여 의사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직역단체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과제3-1. 인력 확충의 핵심 : 의사

- 의료수요(의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매우 부족
- 고령화, 보장성 강화, 감염병 대유행 등 의료서비스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제약, 의공학,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의사 수의 증가는 협력 보건인력의 고용 증가를 수반
- 보수지불제도 개혁 등의 정책 배합으로 의사 수 증가가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음



과제5. 비급여 관리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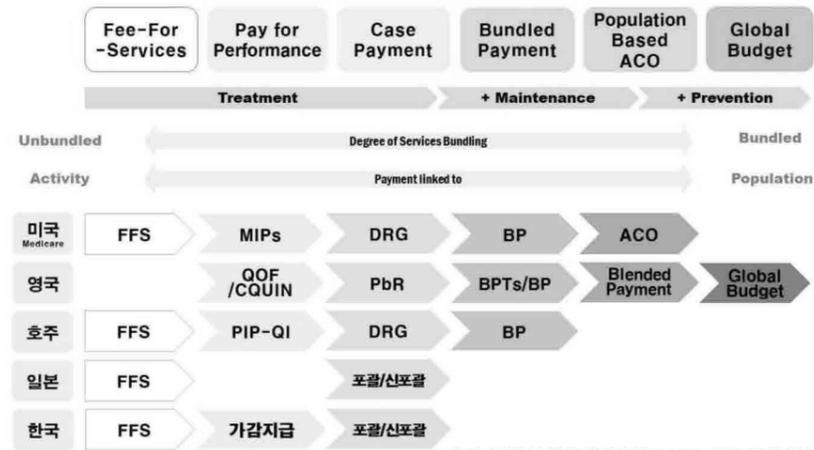
-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6조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로 비급여 관리의 혁신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 혁신이 요구됨
 -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전면 실행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적극적인 급여 전환
-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건강보험 가입자 총진료비(103.3조원, 100%)		
급여 (86.6조원, 83.9%)		비급여 (16.6조원, 16.1%)
공단부담 (66.3조원, 64.2%)	법정본인부담 (20.3조원, 19.7%)	



과제6. 보수지불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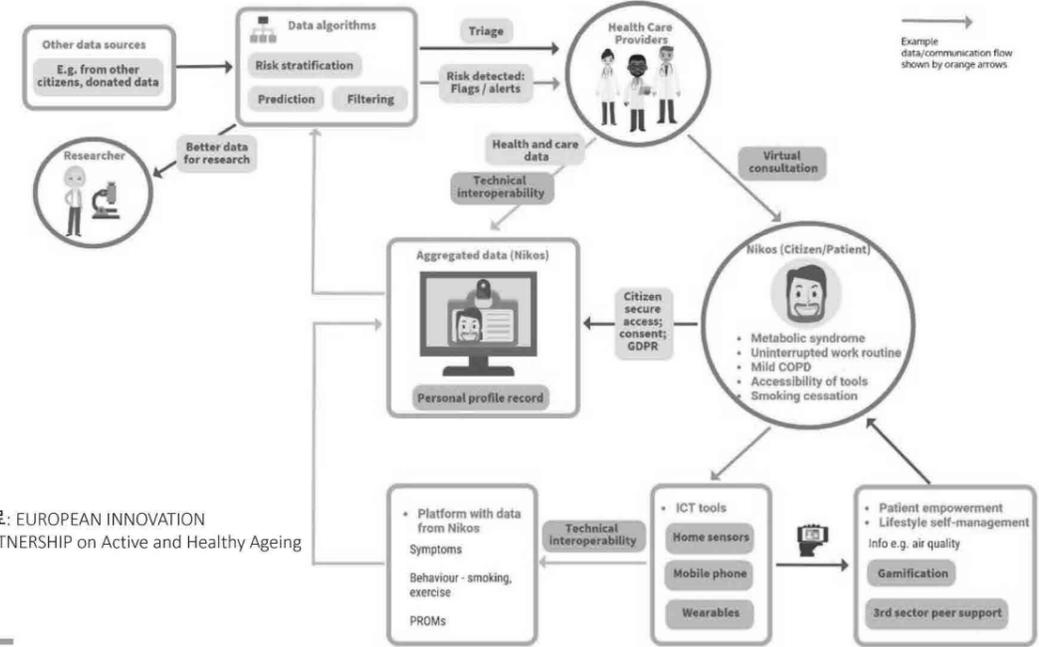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출관리 개혁의 핵심은 보수지불제도의 개편
- 행위별수가제(FFS)의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비용절감 유인을 갖는 대안적 보수지불제도로 개편



과제7.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 건강보험 보험료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 전체 실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 가입자간 형평성 실현으로 수용성 확대
- 담배, 주류, 설탕, 정크푸드 등에 대한 건강세 확대 또는 부과 검토
-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보방안 검토
 - OECD 평균 소비세율 19.3%

과제8. 개인건강정보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활용



과제9.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백신 개발

-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 및 정책지원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획기적 투자와 인프라 강화로 백신안보 확보

